꿈이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은행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제1807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The Kwangju Ilbo www.kwangju.co.kr 2008년 5월 29일 (음력 4월 25일) 목요일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 367-3000

# ‘기름 폭탄’ 무너지는 민생 정부, 현실적 대책 내놔야

## 산업계·지역민들 ‘안일한 상황 인식’ 질타

기름값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산업계와 농어촌은 물론 서민생활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관련기사 3·7·10·11면〉

그러나 이같은 총체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발 떨어진 유류세 인하 등 미봉책에만 매달릴 뿐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어 안일한 정부의 상황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산업계와 지역민들은 정부가 유류의 탄력세율 적용이나 세금 추가 인하, 독과점 정유사의 이익환원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7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경유가격은 1년 반만에 두배가 뛰어 올라 ℓ당 1천850원대인 휘발유가격을 위협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기름값이 공개된 740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230여개소에서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한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LPG가격도 ㎥당 950원대를 넘어 1천원대에 육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농어가는 유가폭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말 800원대에서 5월 현재 1천원대로 상승해 농민들이 시설채소, 화훼농사에서 손을 떼거나, 출어를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화훼 농민 A모(56)씨는 “하우스 농사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경유값이 올라 하우스를 임대로 내놓거나 팔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걱정했다.

화물연대도 “운임은 10년째 그대로인데 운임에서 차지하는 기름값 비중은 70%에 달해 남는 게 없다”면서 정부와 화주·대형 물류사 들이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설 태세다.

국제곡물가에 이은 유가폭등은 올 하반기에 생필품을 비롯해 전기, 철도·버스,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까지 밀어올려 서민경제도 압박하고 있다.

이들 공공요금은 정부의 ‘상반기 동결’ 방침으로 인상이 보류되거나 시기가 미뤄졌을 뿐 인상요인이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등 지역기업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고유가가 제조원가 인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 절감대책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유가상승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 땜빵식 대책만을 내놨을 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가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 실질적인 감세를 유도하는 등 ‘고강도 처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유가 시대엔 역시 자전거**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면서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상무역에 설치한 자전거 무료대여점에도 최근 이용 고객들이 몰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 정부,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도 검토

정부는 28일 유가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과 유가보조금 기한 연장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에너지 관련 요금 및 대금 납부시 바우처를 제시하면 바우처 해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경유값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기 위해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소비 10% 절약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 단체 등의 에너지 절약운동 자율동참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에너지 바우처(voucher)=영세서민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에너지 상품권. 유류·가스 등을 구입할 때 바우처를 제시하면 액면 금액만큼 값을 깎아준다.

# “브뤼셀에 ‘광주 코리아’ 함성 높인다”

##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2

### 광주시·정부 대표단 100여명 출국

“경기장 시설과 도시 인프라, 실사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대회 유치에 대한 열망이 경쟁 도시에 비해 우월한 만큼 집행위원들도 반드시 광주를 선택해줄 겁니다. 총회장에 ‘Gwangju Korea’가 울려퍼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개최지 결정을 위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총회를 이틀 앞두고 광주와 러시아 카잔(Kazan)이 한치의 양보 없는 막판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정부 대표단이 총회 참석을 위해 29일 출국한다.

대표단은 광주시와 유치위, 광주시의회, 후원회, 광주지역 구청장, 시민사회단체, 홍보대행사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00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정부 대표단 단장을 맡게 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문광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출국한다.

이들은 이날 FIS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 31일까지 총회장인 플라자호텔 주변에 머물며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 인프라 등을 적극 홍보한다.

그동안 해외유치 활동에 주력해 온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윤석 정무부시장도 이날 현지에서 합류한다. 지난 22일 브뤼셀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한 유치위는 막판 표심잡기 전략 점검과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3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FISU 집행위원회 총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한국시각 오후 5시30분)부터 브뤼셀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다. 총회는 스페인 비고(Vigo)→러시아 카잔(Kazan)→광주 등 3개 유치 신청도시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막판 판세는 광주와 카잔이 예측불허의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ISU측도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광주는 U대회의 주역인 대학과 대학생, 경기장 시설, 도시 인프라 등 객관적 여건에서 경쟁도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카잔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어서 동정표가 몰릴 가능성이 있고 집행위원 중 유럽표가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일학원 창립 55년 역사의 자랑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 “공공기관 민영화 혁신도시 걸림돌 안 되게”

## 혁신도시협 토론회

“공공기관 민영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전국 14개 시·군·구청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 투자해 결과물을 지방에 분배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수도권 생산성이 지방에 비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타지역 의존도가 낮은 수도권 산업에 대한 투자는 결코 지방에 파급되지 않는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한편으로는 지방육성 정책이면서 동시에 수도권의 질적 발전정책”이라며 “공공기관 민영화는 지방이전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률(통합민주당) 의원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 “‘공공기관의 선(先)지방이전 후(後) 민영화’ 방침을 정부 정책으로 확고하게 담보해야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혁신도시를 건설해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다음달 10일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나주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 정상화를 위한 행보를 계속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